



4면

전주종합경기장 정원의 숲 내달 착공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2년 2월 11일 금요일 (음 1월 11일) 제2958호

대표전화 (063)288-9700



선별진료소 찾은 시민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10일 전주실내배드민턴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앞이 검사를 받기 위해 몰린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전북도, 도내 경제·농업 단체들과

코로나19 공동대응 나서

송하진 도지사 주재 협력회의 열고 공조체계 구축

전북도가 최근 매서운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고자 경제·농업 기업체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송하진 도지사는 10일 도내 경제·농업 기업체 및 유관기관의 관계자들과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경제·농업 관련 기업체 및 유관기관과 코로나19 대응 공조체계를 구축하고자 열렸다.

이는 연일 1,000명을 넘어서는 도내 확진자 발생 현황과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2월 첫째 주 전국 외국인 확진자(5,313명) 모두가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나 사업장 내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작용했다.

영상회의에는 송하진 도지사외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경제통상진흥원 등 소상공인을 포함한 경제 분야 관계자 4명, 전북도 농촌관광거점마을 협의회, (주)하림, 농협 북우촌, (주)잡프레 등 농업경제 분야



송하진 도지사가 10일 도내 경제·농업 기업체 및 유관기관과 긴급 영상회의를 연 가운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먼저, 전북도는 최근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변이 발생 현황과 변경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설명했다.

11일 무주 빙돛불베 스키·스노보드대회 행사 관계로 14일까지 신문 쉽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급격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방역수칙 준수가 유일한 방인임을 강조했다.

이에, 기본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유증상 시 신속 검사와 자가격리 등)과 사회적 거리두기(불필요한 사적모임 자제 등) 준수 백신 접종률 제고,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유연근무제 확대, 영상회의의 진행)를 당부했다.

특히, 내국인(62.7%)에 비해 낮은 외국인의 3차 백신 접종(45.9%) 상황과 외국인 확진자 전원이 미접종자인 점을 감안해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백신접종을 적극 독려했다.

또, 외국인 커뮤니티 활동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의료체계 마비와 위중증·사망자 증가를 방지하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급격한 확산세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며 "각 기관·기업에서 개인 방역수칙 준수 독려와 사업장 내 방역관리 강화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내 농업인의 어려움 적극 수렴해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농업 최저임금 제도 신설 등
최영일 도의원, 농촌인력 수급 대책 수립·제도 개선 촉구

“도내 농업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적극 수렴해 농촌인력 수급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를 향해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도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최영일(순창·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제387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도내 농촌의 문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더욱 심각해져 한계 상황까지 다다랐다”면서 “도내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일 의원이 강조한 것은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문제는 농업인들의 생계뿐만 아니라 우리 전북도 농업·농촌의 미래가 달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흔히 농촌에서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뿐더러, 일손을 구하더라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인건비로 인해 농업인들이 시름을 앓고



있으며,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이처럼 절박하고 급박한 농촌의 현실임에도 농업·농촌의 문제는 여전히 정부가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 문제를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 뒷전에 밀려 있어사다. 최 의원은 “농업인들이 살아남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왔지만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그리고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업생산비는 계속 증가해 이들의 삶은 더욱 더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3~4만원 수준에서 2021년 8만5,000원에서 12만원 이상으로 20년간 3배나 뛰어들라 결국 인건비 등 농산물 생산비의 증가가 농산물 가격 상승과 수입농산물 증가하는 구조로 이어져 농업·농촌의 존립 기반까지 위협하고 있어

사다. 이에, 최 의원이 현실적인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확대와 고용허가제의 농업 부문의 배정 비율을 높이고 품목과 농가 특성에 맞는 인력 공급 컨트론타워와 데이터 구축 등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수급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업 부문의 임금 인상을 최저임금 상승 비율을 넘지 못하게 하는 농업 부문 최저임금 제도를 신설하고, 영구이 실업급여 수급자를 농촌 근로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를 농촌 인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나라에는 임지러를 잃어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훌쩍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노동청이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정보를 공유해 부족한 농촌 인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영일 의원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도내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를 향해 제도개선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도내 여객선 이용료가 ‘반값’

전북도, 발원 시스템 도입 등 준비 내달부터 운임제 본격

이제 누구나 도내 여객선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도시 지역 관광 활성화 기대된다. 전북도는 오는 3월부터 도내 12개 전 도서를 방문하는 여행객 ‘누구나 여객선 운임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값 운임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도내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은 섬 거주자에 한해 운임의 20~50%를 지원했다.

이번 여객선 반값 운임제는 기존 섬 주민에게만 한정하던 지원 대상을 방문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에, 도내 4개 항로, 12개 전 도서

방문객은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특히, 지원 대상과 항로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국 최초로 고 할 수 있다.

도는 지난 3년간 도서민을 제외하고, 연평균 15만 8천여 명이 여객선을 이용한 점에 비해 많은 방문객이 반값 운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늦어도 올해 3월부터는 반값 운임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 예매와 발원 시스템 등을 총괄 운영하는 한국해운조합과 시스템 도입에 관해 협의도 마쳤다. 다만 반값 운임제는 정규 여객 운임

을 할인하는 사업으로, 터미널 이용료나 차량 운송요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할인을 받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할인 등의 경우에는 중복할인이 불가해 할인이 높은 쪽으로 운임을 책정하게 된다.

한편 전북도는 반값 운임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역민 의견을 반영하는 등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 5월 전라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 1월에는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고시를 통해 도민은 물론 전북 방문객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군산시, 부안군과 재원 부담 등 행정 협의도 마쳤다.

이로써 그동안 500원 택시 등 육상교통의 다양한 지원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해상교통의 편익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유호상 기자

